

2000년 한국사회 전망

새로운 천년기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치는 한순간도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다. 국회는 언제나 파행이었고, 지역주의와 반공주의는 여전하다.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길게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혁은 더디다 못해 뒷걸음치고 있다. 집권 하반기를 맞는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결집을 꾀하기 보다는 보수반동세력과의 타협과 아합으로 권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경제는 빈사상태이던 외환보유고가 700억달러를 돌파하고 마이너스이던 경제성장률이 10%대로 치솟아 '위기극복'의 조짐이 뚜렷하지만,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사회균열과 계급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번복이 거듭된 노정관계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노동배제적 관행과 의식을 고수하려는 자본가들의 저항으로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고 있다.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는 "새술을 새부대"에 담기는 커녕 "헌부대에 담긴 썩은 술"들의 악취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 한국 노동운동은 낡은 시대의 묵은 것들을 날려버려야 할 사회변혁의 과제를 여전히 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정치, 경제, 노사관계 노동운동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해 본다. -편집실-

정치정세 전망

박상병

한국경제 전망

정태인

노사관계 전망과 노조운동의 과제

김유선

정치정세 전망

박상병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2000년의 한국정치, 이대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시도할 것인가. 그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민주정치의 주인인 시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 성숙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의 세월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안정이 지상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치가 국정발목을 잡는 오늘의 사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사회를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999년 11월 25일 올림픽 공원 제3체육관에 서 열린 '새천년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치사(致辭)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치안정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표현대로 '정치가 국정발목을 잡는 사태'는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정치안정은 고사하고 정치실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발전'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말조차 어쩌면 '사치스런 정치담론'처럼 들린다.

정치안정이라든 특정집단이나 특정정당이 상대방을 완전히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세력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또 경쟁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세력균형'이야말로 정치안정의 올바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정치가 다른 어떤 정치제도보다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세력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안정'이라는 개념은 종종 잘못 이해된 경우가 많았다. 집권세력은 대부분 정치안정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억누르고 야당을 탄압했으며, 심지어는 비상조치까지 동원하여 권력독점을 공고화시켰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국민들의 저항은 줄었지만 정치는 '안정'이 아니라 '마비' 상태로 바뀌었고, 권력집단은 경쟁상태 없는 무풍지대에서 점차 타락과 부패로 병들어 갔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1. 되돌아 본 정치개혁의 딜레마

1998년,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시기에 '정치개혁'이란 말은 경제위기에 파탄형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문제가 워낙 시급했던 탓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개혁'에 관한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정치개혁을 추진할 만한 바탕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정치개혁에 관한 '준비되지 못한' 정부·여당의 한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부재'가 단순히 정치개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또는 정치개혁

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 즉 개혁 '헤게모니'가 아주 취약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정치개혁의 걸림돌을 하나씩 압박·제거할 수 있는 정치력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개혁 '헤게모니'의 중심에는 이른바 'DJP연합'이라는 어실픈 공동정부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길은 더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개혁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넓은 정치체도의 청산과 부패 정치인의 퇴출을 통해 정치를 정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해소하는 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입장들을 마치 '용광로'처럼 녹여서 지역감정이라는 단일한 쟁점으로 묶어내는 왜곡된 정당구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정치발전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이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부터 좌충우돌함으로써 개혁 '헤게모니'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우선 '정치인 사정' 문제만 보더라도 정치개혁의 당위성

만 강조되었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설득력을 얻어내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의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개혁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부척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어떤 일관성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돌출된 정계개편론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이를 배경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워 야당의원들을 압박해 갔던 모습은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순수성을 오히려 훼손하기까지 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한나라당 죽이기'라고 저항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만큼 정치개혁은 많은 분계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사정칼날이 자민련을 비껴 가는 모습에서도 '개혁다운 개혁'은 이미 빛을 잃고 있었다. 게다가 그 와중에서도 지속된 여당의 '야당의원 빼가기'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감

현정부는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 즉 개혁 해게모니가 아주 취약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정치개혁의 걸림돌을 하나씩 압박·제거할 수 있는 정치력이 마련되지 못했다

안할 때 효과적인 정국운영 방식이기는 했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것도 결코 적지 않았다. 우선 '내각제'를 핵심 고리로 한 자민련의 끈질긴 권력지분 요구에 순응하면서 강력한 개혁 해게모니를 창출한 기반을 일찌감치 포기해야만 했다. 내각제에 관한 자민련의 목소리가 강해질수록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한 발씩 더 양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내각제에 발목잡힌' 청와대·국민회의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문제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극심한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뜬나는 대로 지역주의 정치의 타파를 외쳤다. 그러나 DJF연합, 즉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이 바로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의 '지역연합'을 기초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제값토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DJF연합' 본질이 바로 지역연합이며,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이당의 지역주의적 정치행태만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를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여권의 표현대로 정부는 정치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데 야당은 허구한 날 부산과 대구에 가서 지역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은 정치적 수사(修辭)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바람 피우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자민련을 끌어안고서 정치개혁이나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 정부'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였으며, 동시에 권력의 딜레마였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형성된 선거연합을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속하게 개혁연합으로 바꾸고 국민을 개혁의 동반자로 내세우든지, 아니면 개혁의 깃발을

내리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끌어내서 '상생(相生)의 정치'로 방향을 바꾸든지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고 정국을 표류하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대안이 없는 듯한 '정치적 실패'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실패는 그만큼 뼈저리고 또 아쉬운 대목이다. 권력의 상실로 쇠퇴의 길을 걷던 야당의 앞길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지퍼지게 된 것도 바로 여권에 의한 '정치적 실패'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이 또한 예측불가능한 우리 정치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관치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은 함께 자리한 (가칭)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 지도부.



의 운명을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2. 2000년,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할 제16대 총선

서기 2000년, 한번쯤은 이른바 '밀레니엄 드림'을 말하고 싶은 것은 비단 기업가의 바램만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사회 모든 부문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할 정치권의 경우 밝고 희망찬 '천년의 꿈'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을 것이다. 서구의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이 앞다투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천년의 비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욱이 일부 세계의 야심찬 정치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비전'은 차라리 부럽기조차 하다.

서기 2000년, 한국의 정치사회는 어떤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천년'이라는 배후적이고 자극적인 상상력에 빠지지 말고, 좀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 정치사회의 흐름을 읽어내는 일일 것이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퇴적된 토양처럼 오늘의 무게를 딛고 우리 앞에 나

15대 대통령선거에서 형성된 선거연합을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속하게 개혁연합으로 바꾸고 국민을 개혁의 동반자로 내세우든지, 아니면 개혁의 깃발을 내리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끌어내서 '상생(相生)의 정치'로 방향을 바꾸든지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다.

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가 정치사회라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정치사회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관계의 변화양상과 그 긴장관계를 통해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른바 '전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을 장식할 한국 정치사회의 최대 이슈는 4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아진다. 최초의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중간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최초의 여당후보 패배를 경험한 한나라당의 경우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견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도 내년 총선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자민련의 경우도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지만 '합당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16대 총선 이전에 전개될 굵직한 정치 변동은 신당창당의 파급력과 여기에 자민련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민회의는 신당창당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해 그 동안의 정치실패를 만회하려고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

으로 나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호남정당이라는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자민련과의 합당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민련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두 정당간에 '거래관계'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통상적인 방법대로 상당한 정도의 지분과 주요 당직을 양보해서 합당이 성사된다면 총선거도는 기본적으로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당의 이면에는 '제2의 내각제' 약속이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민련으로부터 이탈된 충청권의 지지를 다시 모으고, 대통령선거 구도에서는 현재 한 발 앞서있는 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여권의 중장기

적 전략은 결국 입기 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이 아니라 공동후보 추천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연합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도에 입각한 정략적인 후보추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저항, 그리고 신선한 감동이 없는 구태의연한 선거전략에서 오는 부담감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합당전략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정치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바람 선거'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쉽게 예단 할 수는

서기 2000년 한국의 정치사회는 어떤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은 제11월 말의 민중대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없을 것이다. 1999년 6·3
 새선거에서의 '고급 옷 돌
 품' 처럼 집권세력의 도덕
 성과 맞물린 중대변수가 터
 저 전국을 강타한다면 여권
 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일
 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해서 선거정국에 임하는
 여권의 태도는 보다 신중해
 지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개혁적이고 참신한 이슈들
 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
 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3. 다시 분출하게 될 정계개편론

'고급 옷 돌품' 같은 '돌발변수'를 고려
 하지 않을 경우, 16대 총선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지역주의' 일
 수밖에 없다. 여권의 선거전략도 어떤 명
 분으로 포장하든 영남 고립화전략을 기
 반으로 할 것이며, 야당 또한 영남권 지
 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창당과 합당
 을 통한 대야 고립화전략에 따라 여당은
 다수의 의석수 변화를 통해 제1당으로 자
 리잡을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그
 려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1당으로 부상한다고 하더라
 도 그것은 지지기반의 변동성 통한 세력
 확대의 결과이기보다는 인위적인 세력관

**2000년을 장식할 한국 정
 치사회의 최대 이슈는 4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제16
 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아진
 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아진
 다. 최초의 정권교체로 집
 권한 '국민의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어
 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상
 의 중간평가인 셈이다.**

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불
 안정한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여당
 이라는 큰 틀로 정치적 결
 합은 형성돼 있지만, 언제
 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느슨한 관계라는 점에서 정
 국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택할 수 있는 정국안정의
 방법은 다시 '개혁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야당,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당 총제를 압박하는 이른바 '제2의 정
 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정치판
 새틀짜기'의 명분은 바로 '내각제 개편'
 이다. 내각제가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2000년의 정세 속에서는 추적
 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 판단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각
 제 결론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이며,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서 구체적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다만 2000년의 정세에서는 정계개
 편 의 명분과 지지기반의 재구축,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이탈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치담판'이라는 점에서 내
 각제를 명분으로 한 정계개편론은 여전
 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16대 총선 이후 새로운 정계개
 편론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경우에는 시기

적으로 이르는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점차 차기 권력구조문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경우 여권 중심의 정국주도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한다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의 '예측되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후보예개로 집중되는 '힘의 쏠림' 현상은 이미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사회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또 비난할 일도 아니다.

특히 대통령제를 놓고 야당과 대결할 경우 이렇다 할 상대후보가 떠오르지 않는 여권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야당압박

을 통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질 여권 내부의 혼란과 내분, 그리고 불협화음은 결국 여당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1997년 당시 여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9룡들의 힘겨루기'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그 가운데서도 내각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으며 여권은 이를 통해 권력기반을 다시 강화하려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내각제 논의의 결론은 뒤로 미뤄질 수 있겠지만 '논의의 확산'을 통해 여권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친 여권세력의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과 정몽헌합을 성공시켰던 한국노총과 '국민의 정부' 회의 관계가 최근 파국으로 치달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원의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



재결집을 통한 야당압박으로 모아진다면 '내각제 담론'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최대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내각제 담론'의 초점이 말 그대로의 내각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권이 다시 주도하게 될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인 사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00년 정국은 새로운 이슈의 창출을 통한 정국운영에 있다고 하기도는 결국 꺼지지 않은 불씨 '내각제 개혁'이 다시 살아나 정계개편론과 결합되면서 여·야의 긴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거 후 다당구조가 형성된다면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다.

4. 정치사회, 변화는 시작되는가

정치사회의 작동원리는 무엇보다도 권력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움직이게 된다. 2000년의 정치사회는 16대 총선을 정점으로 해서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볼 수

'내각제 담론'의 초점이 말 그대로의 내각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권이 다시 주도하게 될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인 사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있다. 게다가 이른바 '3김정치'는 내각제 논의를 통해 그 생명력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3김정치'의 추락이나 아니면 연장이나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3김' 이후를 대비한 각 당 중진의원들의 활약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당 중진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겹으로는 '파벌정치'의 모습으로 표

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근거한 파벌정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결국 '3김정치'의 새로운 전개를 의미하는 질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그 형태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정치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3김정치'와 '지역주의'가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역주의 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3김정치'는 그 형태를 달리하며 당분간 한국정치를 계속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의 한국정치도 이런 맥락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16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못한

다면 2000년에 전개될 정치사회의 변동은 기대만큼 역동적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해야 할 것은 기존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진보세력의 새로운 도전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보수정당체제의 정치독점화 경향은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에 의한 정치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보수정당체제가 바로 '지역주의'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정당정책이나 이념이 쟁점화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개혁정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6대 총선을 대비하는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0년 정치사회의 흐름에 진보세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일차적으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향후 대안세력으로써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지역주의

와 보수정치세력의 정치독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라앉은 듯한 개혁정서의 퇴조 등이 맞물리면서 진보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공간은 여전히 협소하다. 그리고 2000년의 정세에서도 사회적으로 개혁분위기의 왜곡 또는 퇴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앞길은 솔직히 험난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보다 확대된 노조의 정치활동 영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그리고 진보정당의 유연한 정치전략 등이 전향적으로 결합될 수만 있다면 진보세력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맺는 말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정치전망을 거론한다는 것은 과학적 예측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도박'이라 해도 좋을 만큼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 '고급 옷 파동'이 이처럼 오랜 기간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태풍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게다가 앞으로 제2, 제3의 고급 옷 파동이 없으리라고 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불씨 하나가 땅야를 불사르다"라는 말처럼 한국정치에서의 변수는 복잡하고 또 즉흥적이며, 그리고 예측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제도화 수준이 낮으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식과 논리, 그리고 합리성이 취약한 한국 정치의 약한 고리는 결국 일탈의 정치, 상실의 정치를 양산해 내면서 파국과 좌절의 시대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진보와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치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정치를 기대하지만 대부분 그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귀결되기 일쑤였던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서기 2000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사회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바뀌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인식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독점구조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언제까지나 낡은 사고, 낡은 토양으로 한국정치를 지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정치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일은 그 어느

최근 16대 총선을 대비하는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0년 정치사회의 흐름에 진보세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일차적으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때보다 시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 정치가 설사 '꼴치 덩어리' 라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사회는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문제가 많을수록 국민들의 더 큰 관심과 애

정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2000년의 한국정치, 이대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판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시도할 것인가. 그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민주정치의 주인인 시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 성숙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